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 “탄핵심판 결론 조속히 내려야 한다”

### “헌재가 최종적 헌법수호자 역할 해달라”... “헌법 개정 필요하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돼”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박한철 소장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3년 9개월의 헌재소장(재판관 6년)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조속히 탄핵심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퇴임사를 통해 “헌재는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세계의 정치와 경제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아 있는 동료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 헌재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사건의 실체와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을 마무리 지지 못하고 떠나는 박 소장은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는 심경을 밝혔다.

박 소장은 국회를 비롯한 정치적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조정하고 헌법질서에 따라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

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대의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기관들이 결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되며 대화와 타협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 정치적 기관이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말도 전했다.

최근 논의가 활발한 헌법 개정과 관련된 속내도 내비쳤다. 그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다만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소장은 “우리 헌법 질서에 극단적 대립을 초래하는 제도적·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지혜를 모아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며 “헌법 개정은 결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 존엄, 국민 행복과 국가 안정을 더욱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

다”고 제시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더욱 실질화되고, 법의 지배를 통해 시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박 소장은 “몽과비탄상박허(夢勞悲憫上蒼虛·꿈 속에 난세를 타고 푸른 허공에 울었다가)하니 시지신세일거려(始知身世一墟虛·비로소 이 몸도 세상도 한 울막임을 알았네)라. 귀래착인한단도(歸來錯認邯鄲道·한바탕 행복한 꿈길에서 깨어나 돌아오니)하니 산조일성춘우여(山鳥一聲春雨餘·산새의 맑은 울음소리 봄비 끝에 들리네)라”라는 선시(禪詩) 한 수로 자신의 마지막 소회를 대신했다.

2011년 2월 1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된 박 소장은 2013년 4월 12일 이강국 4대 소장에 이어 검사 출신으로 첫 헌재 소장에 임명됐다. /뉴스

### “정유라 다른 증거로 혐의 입증”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국내 송환이 늦어지고 있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해 대면 조사 없이도 혐의 입증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덴마크 법원이 정씨의 구금 기간을 이달 22일까지 연장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사 차질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정씨는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과정에서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정씨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도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정씨의 진술 등이 없어도 다른 관련 증거로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정씨의 송환과 관련해서는 “덴마크 검찰로부터 받은 추가 질의사항에 관해 신속히 답변함으로써 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결정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덴마크 검찰이 22일까지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정씨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국내 송환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1차 수사 기한이 2월28일로 제한된 특검팀 입장에서는 정씨에 대한 대면 조사 없이 활동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셈이다.

그간 특검팀은 정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서를 덴마크 사법당국에 보내는 한편, 정씨 특혜 과정에 관여한 이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의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설명이다.

정씨의 이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근(55) 전 입학처장,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51·필명 이인화) 전 융합콘텐츠학과장 등이 구속된 상태다.

특검팀은 이들을 연일 특검 사무실로 불러 보강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최씨의 재판에 출석한 김성현(44)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최씨와 최 전 총장이 3차례 만났다고 진술한 점 등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새로운 단서들도 영장 재청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최 총장과 최씨의 경우 지난번 조사 당시에도 여러번 통화한 것으로 돼 있다”며 “오늘도 관련된 내용이 추가로 나왔다. 이런 부분이 최 전 총장의 영장 재청구 요소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 “반문은 정권교체 반대하는 연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반문(反文)연대와 제3지대 움직임은 결국은 정권교체를 반대하는 연대”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국민 대세이고, 정권교체를 해낼 사람으로 문재인을 지목하는 것이 국민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야권통합 없이도 정권교체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이미 야권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한마음일 것이다. (경선 등의) 경쟁이 끝나면 다시 하나로 힘을 모으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한쪽에서 원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밀어 붙여서 되는 일도 아니다. 상대 입장에서 배려하면서 분위기에 따라서 함께 힘을 모으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정권교체라는 데의 찬성하는 정당, 세력과 언제든지 함께 할 것”이라며 “끝내 통합이 되지 않는다면, 정권 교체는 바라는 유권자가 통합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연태와 김중권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역할에 대해서는 “김 전 대표는 우리 당의 비례대표 의원이고 정권교체에 함께 당연히 힘을 모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정당책임정치를 공약했다. 정당의 정책 생산과 인사에 대해서도 당정간에 협의하고 추천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뉴스



특검 들어서는 최재석 최순실씨의 이복오빠 최재석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들어오고 있다.

## ‘朴 대리인단 전원 사퇴’ 맞선 국회 측 의견서 제출

### ‘심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 탄핵심판에서 변호사 강제주의 적용 안 된다는 주장 담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 소추위원단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로 해석될 수 있는 중대 결심 발언을 한데 대한 의견서를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1일 헌재에 따르면 국회 소추위원 측은 지난 29일 A4 용지 10장이 조금 넘는 분량의 ‘심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측은 해당 의견서에 예정된 증인신문 진행과 관련한 국회 측 의견과 탄핵심판 절차에서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9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오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꺼내자 “중대 결심”을 운운하며 즉각 반발한 박 대통령 측 주장을 재반박하는 의견서인 셈이다.

당시 박 대통령 측의 발언이 나오자 법조계에서는 이른바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 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3항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해당 조항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에서도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이종환 변호사가 9차 변론에서 한 발언을 이 조항에 적용하면 대리인단 전원사퇴로 탄핵심판 심리가 멈춰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당시 이 변호사는 “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 TV토론에 나와 2월 7일 이후에는 증인신문이 종결되고 3월 9일 전에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며 “박 대

통령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심판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중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초강수를 던졌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일부에만 적용될 뿐 탄핵심판과는 무관하다는 지적도 있다. 즉 변호인 선임이 이뤄지지 않아도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탄핵소추 대상자에게는 심리를 진행할 수 없어 탄핵심판 본질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측이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탄핵심판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적용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와 관련해 헌재의 선례도 없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상황인 만큼 실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헌재의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다. /뉴스

### 반기문 “춧불집회 변질된 것 같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31일 촛불집회와 관련, “광장의 민심이 초기의 순수한 뜻보다는 약간 변질된 면도 없지 않다”고 말해 논란을 예고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한 뒤 “다른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면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제가 촛불집회 현장에 가 보지는 않았지만 TV화면을 보니 달라지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며 “요구하는 구조가 제 생각과 좀 다르다”고 부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규제TV’ 외의 인터뷰에서 촛불집회와 광우병 집회가 유사하다고 밝힌 것과 같은 취지냐고 묻자, 이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반 전 총장은 또 “정치인들이 너무 정치문제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각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20여일 서울에 있으니 제 자신도 거기에 합몰되는 것 같아”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을 각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제가 정치 신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신인의 눈으로 보는 게 어떨 때 보면 더 정확하다고 밝혔다. /뉴스

## 이용호 의원 “정부, 담뱃값 대폭 인하해야”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이 실패했음을 지적하며, 담뱃값을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

정부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담뱃값을 인상한지 만 2년이 넘었으나, 금연 효과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담뱃값 인상 첫해인 2015년 담배 반출량은 31억

7,000만갑으로 2014년 45억 2,000만갑에 비해 감소했으나 2016년에는 37억 5,000만갑으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다.

양담배의 판매량도 늘어났다. 2012년 39.1%, 2013년 39.3%, 2014년 38.8%로 40% 미만을 유지하던 양담배 점유율이 2015년 43.2%, 2016년 8월까지 42.4%로 증가한데 이어 2016년 담배 수입액은 4억 1,020만 4,000달러로 1996년(4억 2,401만 4,000달러) 이후 최고액을 기록했다.

담뱃값 인상은 금연 효과는 없었지만 국제 증가에는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담뱃세는 2014년 7조, 2015년 10조 5,000억원에

서 지난해 12조 4,000억원으로 늘었고, 그 중 대부분은 국세로 흡수됐다. 시민들의 담뱃값이 정부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다”며,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목을 내세웠을 뿐, 실질적으로는 시민의 주머니를 쥐어짜 정부의 배를 불리는 중세 정책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의 건강은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담뱃값을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청와대, 자유총연맹 안보강사까지 ‘낙하산’ 지정

청와대가 국내 최대 보수우익 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자총)의 안보강사까지 지정해서 내려 보내는 등 이 단체의 대외활동에 전방위로 개입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청와대가 지정한 ‘낙하산’ 안보강사는 주로 우익단체와 보수언론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었다.

최근 뉴스스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허현준(48)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은 2015년 9월24일 자유총연맹 전 고위관계자 A씨에게 ‘자총 안보강사 추천대상자 명단을 보내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A씨는 자유총연맹 간부로 활동할 당시 허 행정관으로부터 각종 관제시위,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박수부대’ 동원 등의 지시를 받는 창구 역할을 한 인물이다.

허 행정관은 A씨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안보강사, 통일·북한 시민단체 관계자 중 올바른 안보관과 강연 실력을 갖춘 인사를 추천함”이라는 글과 함께 5명의 인사를 안보강사로 활용하라고 요구했다.

허 행정관이 추천한 인물들은 당시 대통령자문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북한 전문 매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닷새 뒤인 29일에 답례일을 보내 “(허 행정관 이) 보내주신 명단을 안보강연 담당하는 팀(연구소 교육팀)에게 전달했습니다. 현재 100명의 강사진을 교체직업하는 중이라고 해서 잘 부탁한다고 해 왔습니다”라고 청와대 요구대로 실행하고 있음을 전했다.

A씨는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과 관련해 “자유총연맹 안보강사는 각 중·고등학교에서 안보 강의를 하게 돼 있다”며 “청와대 측은 연맹이 소위 ‘이스라엘 보수’라고 하는 가두시위 활동 대신 교육이나 사회봉사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다 보니 이념적 성격이 약해졌다고 봤고, 안보강사전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집어넣어 정신교육을 해주길 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청와대에서 지명한 5명이 실제로 연맹의 안보강사로 활동했는지 여부는 확인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학교에 가서 안보강사들이 과거 경험담, 우리나라 발전상 등에 대해 특별시간에 강의를 한다. 엄밀히 말하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세뇌교육”이라며 “연맹이 도맡아서 안보강사 100명 정도를 두면 각 지역에서 필요에 맞게 강사들을 쓰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번 강의할 때마다 10만~20만원을 준다. 정확한 계산은 안 해봤지만 1년에 1000여건 정도 한다”면서 “지자체에서도 청소년 교육 일환으로 책정하는 예산이 있다. 그것을 사용할 때도 있고 우리한테 돈을 지급해달라고 할 때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안보강사는 매년 교체해 100~150명으로 명단을 정리한다. 대부분 본인들이 신청하고 우수하다는 분들은 우리가 찾아가지도 한다”며 “(감동기관인) 행정자치부에 명단을 알려주지만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다. 청와대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추천이 내려 온 건 2015년 9월 그때가 처음”이라고 전했다. /뉴스